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신처	전북지역 각 언론사 사회부
(경유)	담당 기자
제목	<성명> 전주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규탄 성명

1.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다가오는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약속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기조가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전주의 모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있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전북본부가 이 같은 단속을 촉구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보다는 상호 경쟁 관계로 상정한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3. 이에 저희 단체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가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각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담당 : 채민(상임활동가, 010-8639-0214)

[첨부] 성명서 1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담당 : 채민

시행 : 16-06 (2016. 12. 15)

[5499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공동대표 : 문규현, 송기춘

접 수 : (2016. .)

누리집 <http://www.onespark.or.kr>

E-mail:onespark98@gmail.com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현장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규탄한다! 내국인·이주노동자 권리의 증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자!

다가오는 12월 18일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같은 날에 UN 제45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하지만 한국은 UN이주노동자협약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약 2주전에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주의 A 건설현장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더 파악해야지만 이 같은 단속과 추방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해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관련 행정기관에 단속실시를 촉구한 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UN이주노동자협약은 미등록노동자이건 아니건 간에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비자가 없다고 해도 이들 전체가 바로 범죄자들인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게다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각 출입국사무소는 인간사냥이라 할 만큼 가혹한 방식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경주에서도 한 여성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던 중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나아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산업구조 등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 이주민 및 인권단체의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무조건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줄이고 보는 식으로 반인권적인 단속추방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편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시민사회에서도 소위 합법·불법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 권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권리의 확장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없다. 미등록에 대한 추방과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권리 보장은커녕 밑바닥 노동에 이들을 내몰아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내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역시 함께 하락하고 자칫 인종주의에 입각한 차별과 증오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를 경쟁 구도로 접근하거나 전제하지 않고, 양자의 권리를 함께 증진시키기 위한 연대의 모색만이 전체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체류에 있어 미등록·등록은 있을지라도 기본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 ‘불법 사람’은 없다. 우리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추가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모든 이주노동자·이주민들에 대한 연대를 통한 권리 증진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 부끄럽지 않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바란다.

2016. 12. 15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직인생략)